

지방재정 대책·저출생 극복 지방재량권 확대 건의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

姜시장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전국 정책 확산을”
金지사 “출생기본수당 제도 개선·김 양식장 추가해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25일 오후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역균형발전·지방재정 대책 마련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지방재량권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강기정 시장, 김영록 지사 등 13개 시·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 회장, 국무총리, 주요 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실무협의회의 논의 경과 보고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선 방안(행정안전부) 심의 ▲저출생 대응 중앙-지방 협력 방안(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방안(지방 4대 협의체) 보고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강기정 시장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도 광주가 선제적으로 시행 중인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24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과 같은 저출생 대책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들은 전국적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저출생 대응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정책으로 광주시의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사례를 언급했다. 광주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24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은 지난 11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관한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을 수상하는 등 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가 25일 오후 충남도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연합뉴스

김영록 지사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지역 맞춤형 복지시책과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지자체 재량권 인정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저출생 대응 토론회에서 “인구 감소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복지시책과 지역특화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지방에 권한이 없어도 되는 것 하나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토론했다. 특히 김 지사는 “저출생과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전남 22개 시·군과 함께 추진 중인 전남도

-시·군 출생기본수당의 경우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받아야 시행이 가능한 실정”이라며 “지방에서 스스로 필요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재량권을 인정해주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 올린 김 산업 육성을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남이 세계 김 시장을 선점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4천500ha 규모의 김 양식어장을 추가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재정·박선강 기자

도의회, 전남 예비지정 대학 ‘글로벌30 본지정’ 촉구

목포대·동신대연합 등 2곳 “지역 소멸·지방대학 위기 극복 절실”

전남도의회가 국립목포대학교와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 연합의 글로벌30신규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25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지역 소멸과 지방대학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균형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또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빨리 지방소멸이 진행 중이고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폐교를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며 “교육부는 전남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서남권 중심 목포대와 혁신적 사립 연합체인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 연합을 글로벌30으로 선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도의회는 “지방소멸

위험은 학령인구 감소와 학생 수도권 집중을 초래하고 이는 지역 간 극심한 교육 불평등과 지방대 소멸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방대 쇠퇴는 지역 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지역과 지방대의 공생을 위한 전략적 협력과 공동발전 모색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도의회는 “지역대학의 재생 기반을 마련하고 대학과 지자체 간 연계를 통한 해상풍력, 조선, 해양수산, 모

빌리티, 데이터산업 등 전남도 미래 주력산업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목포대와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 연합의 글로벌30대학 본 지정은 필수불가결한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글로벌30대학 선정은 단순히 교육 부분만의 미래 계획이 아닌 지방소멸을 막는 마중물이자 지역의 자생력을 되살리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지역대학에 대한 글로벌30대학 지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재정 기자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법 컨설팅 확대를”

윤명희 도의원 “안전·보건 인프라 취약...대책 절실”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윤명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장흥2)은 지난 25일 전남도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업무보고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확대를 주문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이다. 올해 1월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은 올해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사업’(총 50회)을 운영하고 있다. 윤명희 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라 전남도내 대부분 사업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

역 중소기업자들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증진과 주도적인 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정 기자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지역발전 사업 평가’ 우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사퇴해야”

광주시의회 민주당 의원 21명 “5·18 왜곡·편향”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2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 21명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진숙 후보자는 과거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라고 표현

하고 ‘폭도들의 선동’으로 편향하는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는 등 역사적 의미를 왜곡했다”며 “또한 5·18단체는 이권단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해 그들의 명예를 훼손했고, 제22대 총선에서는 5·18민주화운동 편향 인사인 도

태우 변호사를 공개 지지하는 등 그릇된 역사관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방송통신위원회는 권력기관으로부터 독립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현상과 그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공정하게 기록해 전달하는 공공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릇된 역사관과 편향된 정치 성향을 갖고 여과 없이 실행에 옮기는 이에겐 결코 방송 통신의 수장 직을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의원들은 또 “그칠 줄 모르는 역사 왜곡 시도로 인한 5·18민주화운동 참여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반드시 독립적이고 반드시 공정해야 할 언론을 향한 국민적 기대를 무시한 채 부적절한 인사를 반복하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윤 대통령과 이 후보자의 몰염치한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 후보자의 ‘공식적 인사과’와 ‘후보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선강 기자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알고당사다

개인형이동장치

- 무면허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범칙금 10만원
- 승차정원 초과**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 1명
전기자전거: 2명
범칙금 4만원
-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범칙금 2만원
- 음주운전**
운전면허 정지·취소
범칙금 10만원
- 어린이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과태료 10만원

KoROAD 도로교통공단